

한국의 학술지원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고 영 진*

1.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현황
2. 한국학 연구지원 현황
3. 앞으로의 과제

1.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현황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의 마음은 여러모로 착잡하다. TV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한국의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시스템도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지금 한국 연구재단에서의 인문·사회 분야의 위상을 보면 꼭 개가(改嫁)한 어머니를 따라 새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사는 의붓자식 꼴이다.

착잡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의 하나였던 한국학술진흥재단과의 인연 때문이다. 필자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그곳

* 광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대표논저 : 2007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 2008 「16~17세기 예학의 지역적 분화과정과 그 특징」 『국학연구』 13 ; 2009 「박세채의 학문과 儒學史 인식」 『韓國思想史學』 32 ; 2009 「양반관료 류희춘의 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태학사 ; 2012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韓國思想史學』 41

인문학 분야 책임전문위원으로 있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풍문에 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편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쉬면서 내 공부 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전문위원직을 수락했던 것인데 ‘좋은 시절’은커녕 2년 동안 정신없이 일만 하다 학교로 돌아왔다.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학술연구지원기관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중이었는데 변화의 방향은 크게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었다.¹⁾ 2003년 이전 한국학술진흥재단에는 3명의 파견 교수와 2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실제 연구지원사업은 재단 직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것이 필자 때부터 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수해양학, 예체육학 등 8개 분야에 걸쳐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재단 연구지원사업의 기획과 심사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212개 세부 학문 분야별로 3명씩 모두 636명의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들이 위촉되어 이들이 신청과제에 대한 패널 분류, 심사자 추천, 심사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되 패널 분류나 심사자 추천을 수행한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학연과 지연에서 오는 부정적인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

1)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사는 크게 준비기(1979~1985), 본격적 지원기(1986~1998), 도약기(1999~200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준비기는 1979년 학술진흥법이 통과되고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연구지원을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본격적 지원기는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도약기는 1999년 시작된 BK21사업에 이어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인문학한국사업 등이 시행되고 PM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지원기관으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손흥기·고영진·이현우, 2007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분석 및 평가 1996~2005』, 한국학술진흥재단 참조).

력하였다.

전문위원들이 연구지원사업을 주도하면서 나타났던 또 하나의 변화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독립성 강화였다. 1981년 2억 원의 예산과 16명의 직원을 가지고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지원기관으로 출발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95년까지 역대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대부분 교육부 출신 관료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인적자원부의²⁾ 입김이 강한 곳이었다.³⁾ 그러나 전문위원 중심으로 연구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중간에 우여곡절도 없이 앉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영향력은 점차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한국과학재단과 통합될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4년도에 과학기술부로부터 18개의 기초과학지원사업이 이관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전 학문 분야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지원기관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인문·사회 분야를 지원하는 다른 연구지원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곳은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였다.

잘 알다시피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미약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정부의 R&D 투자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표 1>을 보면 잘 드러난다.

2) 교육부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3) 1995년 김종운 서울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처음으로 학계 출신이 이사장이 되었다. 이후 박석무 국회위원, 김성재 한신대 교수, 주자문 충북대 총장, 허상만 순천대 총장 등이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사무총장도 계속 교육부 출신 관료가 임명되다가 1998년 한민구 서울대 교수가 학계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표 1> 정부 R&D 및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학술연구지원 예산(2002~2010)⁴⁾****(단위 : 억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정부 R&D 예산	61,415	65,154	70,827	77,996	89,096	97,629	110,784	123,437	137,014
학술연구 지원 예산 (인문·사회)	1,306	1,286	1,196	1,225	1,192	1,478	1,602	1,662	1,809
학술연구 지원 예산 (기초과학)	995	990	1,065	1,661	1,745	1,737	1,998	11,572	14,674

2002년 6조 1,415억 원이었던 정부의 R&D 예산은 2008년 11조 784억 원으로 80% 늘어난 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2002년 1,306억 원에서 2008년 1,602억 원으로 23%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02년 2.12%에서 2008년 1.44%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면서도 크게 변화가 없어 2010년에는 1.32%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국가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가 천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의 인문·사회 분야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초과학 분야와 대등한 위치에까지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의 <표 2>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4) 2006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분석 및 평가 1996~2005』(2007,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수록된 통계를, 2007년 이후는 『2011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통계연보』(2011, 한국연구재단)에 수록된 통계를 참고하였다. 또한 2008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통계이고 그 이후는 한국연구재단의 통계이다.

<표 2>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 예산의

인문·사회 대 기초과학 비율(1995~2010)⁵⁾

(단위 : %)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문·사회 분야	18	24	38	36	43	57	53
기초과학 분야	82	76	62	64	57	43	47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문·사회 분야	53	42	42	46	44	13	12
기초과학 분야	47	58	58	54	56	87	88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였으며 1998년까지 20%대에 머물다가 점차 늘어나 2002년 인문·사회 분야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5년부터는 다시 줄어들었으나 꾸준히 40%대를 유지하였다. 이는 인문·사회 분야가 기초과학 분야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재단 안에서 그 만큼의 발언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09년 6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한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하면서 한순간에 바뀌고 만다. 재단 연구개발 예산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인문·사회 분야 예산의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 2010년 재단 전체 예산이 2조 7,304억 원이고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1,809억 원이었으니 7%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 비록 인문사회연구본부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나 재단 안에서 발언권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통합 당시 많은 인문·사

5) 2006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분석 및 평가 1996~2005』(2007,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수록된 자료를, 2007년 이후는 『2011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통계연보』(2011, 한국연구재단)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비율을 산출하였다.

회 분야 교수들이 이 점을 염려하여 통합에 반대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때 외국에 방문교수로 가 있어 논의의 현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지만 아마 인문·사회 분야 대부분의 교수들이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시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국가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였다. 그러면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NEH(National Endowment of Humanity : 국립인문재단)와 AHRC(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 인문예술연구위원회)를 정부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따로 설립해 지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통섭과 융합이 시대의 유행이라고 하나 통합도 대등하고 서로 소통이 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이지 하나가 전혀 다른 하나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고 효율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있을 때 필자는 전문위원으로 같이 일했던 이공계 교수들로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의 차이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다. 한 마디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그래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으나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부 관료들에게 팔매어 있다는 소리였다. 비슷한 소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이후에도 계속 단장으로⁶⁾ 일했던 어느 교수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통합 이후에는 구 과학기술부 관료들이 각종 정책들을 예전에 비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해 재단으로 내려 보내 단장으로서 아이디어를 낼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이야기였다.⁷⁾

이러한 문제점은 재단 통합 이후 해를 넘기기도 전에 드러나기 시작했

6)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책임전문위원은 2005년 단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7) 『교수신문』 2009년 4월 20일 「심사 후 1시간 만에 문의 전화...교과부 통합 이후 일방통행 심해져」

다. 2009년 말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서 1차 전공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서 월등한 점수로 1등을 차지했던 지원과제가 결국 최종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자 참여 교수들이 정치적 이유로 탈락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⁸⁾ 1년이 갓 지난 2010년 여름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의 모든 사업이 학문단장들을 배재하고 인문사회연구본부장과 재단 직원인 인문사회연구지원단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인문·사회 분야 5명의 단장이 모두 사표를 내고 결국에는 인문사회연구본부장과 재단 이사장까지 사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⁹⁾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문학, 역사철학, 사회과학, 법정상징, 문화융복합 5개 분야로 되어있던 단장의 수를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융복합 3개 분야로 줄이고 단장의 권한을 축소해 버렸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이 이전 한국학술진흥재단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과학기술부 관료들의 개입이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인문·사회 분야가 푸대접을 받고 이전의 한국과학재단 체제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학술단체협의회와 교수신문이 함께 인문·사회 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한국연구재단 출범 이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지원이 취약해졌다는 대답이 68.8%, 자연과학 중심으로 운영되어 과거보다 불편해졌다는 대답이 66.8%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¹⁰⁾

통합된 이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처음 발간한 『2011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통계연보』를¹¹⁾ 보면 인문·사회 분야는 각종 학문 분류에서 ‘기타(인문

8) 『경향신문』 2009년 12월 2일 「중앙대 독일연구소, HK연구지원 사업 탈락 부당」

9) 『교수신문』 2010년 7월 19일 「말뿐인 전문성 강화...학문단장은 지원단장 지원하는 ‘들러리’였다」; 『경향신문』 2010년 9월 26일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결국 사퇴」

10) 『교수신문』 2010년 9월 25일 「인문사회과학 학술정책’ 공동 설문조사」

11)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통계연보는 『학술연구지원통계연보』라 해서 ‘학술’

사회)’ 한 항목으로 처리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가 재단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을 쓰느라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재단 홈페이지에 왜 ‘4대강 e 가이드북’이¹²⁾ 버젓이 자리 잡고 앉아 연구자들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술지 지원제도 문제도 이러한 한국연구재단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술지 지원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실태 점검과 공청회, 장관 주제 토론회 등을 거쳐 2011년 12월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4년 12월로 현행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여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2015년부터는 현행 국내학술지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소수의 학문 분야별 우수 학술지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 수준의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¹³⁾ 이유는 등재(후보)학술지가 양산되어 변별력이 약화되고 각기 상이한 학문 분야에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학문 분야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등재지 논문 게재 여부가 연구자의 인사관리와 연구실적에 반영되고 국가 연구비 지원사업의 핵심평가 자료로 사용되어 학계에 영향력이 지대한 반면, 질 관리는 허술하여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꼭 사돈 남 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만든 주범이 누구인가. 몇 년 전만

자가 붙어 있었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에서는 ‘학술’자가 사라져 버렸다.

12) 4대강 e가이드북에는 4대강은 물론 아라뱃길까지 소개되어 있다.

13)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 2011 「학술지 지원 제도 개선방안—현 학술지 평가 제도의 학계 자율평가체제로 전환 및 우수학술지 육성—」(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12월 7일 보도 자료)

하더라도 모든 지원 사업에 연구업적을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집어넣어 지방의 조그만 대학의 교수들까지 온통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쓰느라 난리법석을 치게 만들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취업률을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바꾸어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취업준비학원으로 만들고 교수들을 졸업생들 취직을 위해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곳도 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이다. 그리고 이 등재 제도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관료들이 슬쩍 끼워 넣은 것이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이다. 도대체 등재(후보)지 평가 문제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왜 그 예산을 이 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것인지. 무책임의 극치이고 전형적인 유체이탈 방식이다.

더 심각한 점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인문·사회적인 사고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공계분야에서 많이 사용해 재미를 보았던 압축성장 방식을 인문·사회 학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

국회와 언론에서 두드러 맞고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연구소, 학회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고 2개의 정책연구를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런데 한 정책연구는 책임자와 연구자가 모두 이공계이고 다른 정책연구의 책임자는 교육부 관료 출신 교육행정 전공이고 5명의 공동연구원 가운데 2명이 이공계, 1명은 신문방송, 2명은 교육행정이 전공이다. 당사자들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이 학술지 문제와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문·사회 분야 기초학문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

이 두 정책연구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Top Journal)를 창간하고 국내 우수 학술지를 선정·지원하자는 것이고,¹⁴⁾ 다른 하나 역시

설문·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최우수학술지(핵심저널 : Core Journal)를 선정·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 이공계에나 맞을 대책들이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 가운데 인문사회계열과 과학기술분야 전공자의 비율이 43.7% 대 56.4% 이니 이공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¹⁵⁾

이후 공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성이 훼손되고, 학술지가 하향평준화 되고 평가 집행 및 결과 적용의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학술지평가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거기에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부가 학술지의 세분화를 조장하고 난립을 초래했다는 말까지 내놓지 않는다.¹⁶⁾ 우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린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발표된 개선방안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에 의한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제도가 문제가 많아 학계 자율에 맡긴다면서 왜 우수학술지라는 등급은 또 만드는 것인지. 진정 학계의 자율과 자생력을 바란다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완전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개선 방안은 지난 판은 수가 너무 많아 통제하기가 힘들니 새판을 만들어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수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학계를 통제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이 무슨 원료를 넣으면 곧바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인가.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우수학술지 지원사업 신청요강에 나와 있는 ‘평가항

14) 심광보 외, 2010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15) 설문조사 응답자 총 631명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276명(43.7%), 과학기술분야 전공자가 355명(56.4%)이다(오세희 외, 2011 『학술지 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참조).

16) 『교수신문』 2011년 8월 29일 「학술성 훼손하는 평가제도 폐지하자」

목 및 배점표'에는 '우수논문 유치 전략'이라는 항목이 20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비 산정 및 집행 기준표'에 이를 위한 '논문투고'비 항목이 있으니 해의 저명학자들 논문을 돈을 주고 받아오라는 말이다. 또한 2012년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신청요강에 나와 있는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발행횟수 항목을 보면 배점이 0점(1회 이하)부터 10점(11회 이상)으로 되어 있다. 둘 다 모두 전형적인 이공계식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이런 지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만나 경의를 표하고 싶어질 정도이다.

이공계 따라 하기는 이것 말고도 계속된다.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고 하면서 개최한 워크숍에는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인사들을 초청해 한 수 배우고,¹⁷⁾ 나아가 이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이름을 모방해 한국인문학총연합회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학술지 평가 제도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데에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의 잘못도 적지 않다.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온정주의가 많은 자격 미달의 등재(후보)지를 양산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고 우수학술지 제도로 몰타기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일은 벌여놓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관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는 하나 이번만은 그런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한다.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안은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로 나누고 인문·사회 분야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7)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지원팀, 2012 「국내 학술지의 질적수준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편집인 워크숍」 (한국연구재단 2012년 6월 12일 워크숍 자료)

2. 한국학 연구지원 현황

공대 교수가 이사장이고 교육행정 전공인 전직 교육과학기술부 관료가 사무총장인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처지가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 새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사는 의붓자식 꼴이라면 그럼 한국학 분야는 어떤 처지일까? 한마디로 형제들에게 왕따 당하고 계모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는 큰 자식 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학 분야는 사라져 버렸다. 관련 사업이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 연구 지원사업에서는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선정된 과제들을 보면 한국학 분야 과제들은 가뭄에 콩 나듯이 보이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을 억지로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유독 한국학 분야만은 떼어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잘 알다시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유신시대인 1978년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을 삼고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며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민족중흥을 위한 국민정신을 드높이고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¹⁸⁾ 이 기관은 개원식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정도로 애정을 가진 곳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직후 이곳에 재직하고 있던 모교수가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외치며 파문을 일으켰던 기

18) 『東亞日報』 1978년 6월 28일

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200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비로소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하 기관이라는 위상과 부임한 역대 원장들의 면면에서 볼 수 있듯이¹⁹⁾ 진정한 독립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선배 교수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는가”라고 외치고 있는 교수들도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설립 목적에서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본래 한국학 연구와 연구자 양성을 주 기능으로 하여 출발한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사업을 늘려 나가다 이제는 연구지원기관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관에 있는 사업 내용이다.

1.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2. 국내외 한국학 분야 연구자 및 교수 요원 양성
3. 한국 고전 자료의 수집·연구·번역 및 편찬
4. 한국학 연구 성과의 발간 및 보급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보급
6. 한국학 학술 정보의 전산화 및 보급
7. 한국학의 연구·보급·확산을 위한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협력
8.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및 지원
9. 국내외 한국학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관리(2009년 1월 30일)
10.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사업(2009년 1월 30일)

19) 현 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실장을 지냈던 정정길이다.

2009년부터 정관에 연구지원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미 2006년부터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연구지원기관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계기는 그 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관료들은 평상시에는 가만있다가 국회나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호들갑을 떤다.

이때도 국회에서 해외한국학을 지원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이고 사업도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중인 2005년 3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2007년부터 한국학 과정에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기사와²⁰⁾ 폐지된 것이 한국 책임이라는 한국학 담당교수의 인터뷰가²¹⁾ 언론을 도배하자 정부의 대책 마련 과정 속에서 갑자기 교육부총리의 직권으로 해외한국학 지원사업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넘어간 것이다.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학 분야 책임전문위원으로 있었던 필자는 그 과정을 잘 아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좌충우돌하다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쪽의 적극적인 로비와,²²⁾ 말 잘 안 듣는 한국학술진흥재단보다는 고분고분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일하는 것이 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점도 없지 않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듬해 교육인적자원부는 10년간 매년 300~400억 원을 지원하는 「인문학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서 한국학 분야 기획연구지원사업은, Dynamic Korea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45억을 따로 떼어 한국학중앙연구

20) 『동아일보』 2005년 5월 6일 「한국, 해외 한국학 지원 규모 일본의 1% 수준」

21) 『연합뉴스』 2005년 4월 7일 「英 옥스퍼드大 한국학 위기는 한국측 책임」

22)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은 교육부총리를 지낸 윤덕홍이었고 현직 교육부총리는 김진표였다.

원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원 안에 연구지원을 담당할 한국학기획사업단까지 만들었다. 한국학기획사업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왕실 문화총서, 아시아와 한류, 모던 코리아를 주제로 한 한국학 교양총서, 한국 고전 100선 영문번역 등의 사업에 지원하였다. 이어 2010년에는 한국학기획사업단을 한국학진흥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학진흥사업과 해외한 국학진흥사업, 한국학기획연구사업을 한국학진흥사업으로 통합하여 한국학진흥사업단에 관리를 위탁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중 한국학 분야가 위탁 관리 형식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 개인연구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한국학 관련 지원사업이 망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해외 한국학까지.

한국학진흥사업 예산은 해마다 늘어 2012년에는 국내외를 합쳐 272억 8천만 원에 달하였다.²³⁾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연구·교육·국내외 연구지원까지 아우르는 한국학 분야의 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에서 “국학 연구의 총본산이 돼줄 것을 당부”했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꿈이 30여 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²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학의 본산’이란 말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학의 총본산’이라고 했으면 더욱 완벽했을 텐데…….

어쨌든 한국학 분야 연구지원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부설기구인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학문 생태계의 왜곡이다. 우리는 ‘한국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사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

23)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예산 70억을 합친 금액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도 한국학진흥사업 시행계획」 참조).

24) 『東亞日報』 1978년 6월 30일

구분야분류표에는 들어있지도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학(Korean Studies)이란 용어는 주로 해외 국가들에서 지역학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그곳에서는 소수학문이고 연구자가 적다 보니 당연히 지역 또는 국가 단위로 묶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²⁵⁾ 그러나 한국학이 조금만 활성화된 국가만 하더라도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한국역사’, ‘한국문학’, ‘한국경제’라고 하지 ‘한국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학’ 대신 ‘조선학’ 또는 ‘국학’이라는 용어로 한말·일제시기부터 1970년대까지 많이 사용하였다. 당시 상황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였거나 아직 근대적인 학문 연구가 일천한 때였다. 따라서 이때의 ‘국학’ 또는 ‘조선학’의 범위는 주로 문·사·철, 즉 한국문학·한국사학·한국철학 중심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학문 연구의 연륜이 쌓이고 한국학 분야에 속한 연구자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많아지고 그 성과가 제일 많이 축적된 지금 새삼스럽게 ‘한국학’을 말하고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학의 위기’는 해외에 있지 한국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 한국학의 위기’는 지원 예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 한국의 한국학 분야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가장 낮은 수준의 해외 한국학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본국의 한국학 분야 학문들을 꿰어 맞추는, 말하자면 국내 학문이 해외 한국학에 맞춰서 편성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25) ‘한국학’의 개념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김동택, 2002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을 위하여-국내의 한국학 지원현황과 대안-」 『역사비평』 67 ; 2006 「한류와 한국학-해외 한국학 현황과 지원방안-」 『역사비평』 74 ; 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2005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역사 ; 조성택 외, 2009 『한국학 발전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종합 계획』, 한국연구재단 참조.

예가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 분야랍시고 해외 한국학과 국내의 한국학 분야 연구를 구분 없이 한데 뭉뚱그려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학 분야의 학문들은 ‘한국학’이라고 특별히 떠들지 않아도 각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며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 기초학문육성사업의 토대연구와 지금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처럼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사업일 것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이란 뜻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개원식에서 말한 ‘국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구 인력이 1개 대학 수준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학’을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내세우고 자신들이 그것의 본산(중심)이라고 하고 앉았으니 듣는 사람은 황당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 안 통하니까 돈으로 강요를 하는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이다. 그 결과 한국학 분야의 쟁쟁한 연구자들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곳 성남의 골짜기에 와서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더욱 문제는 일개 대학원대학에 불과한 연구·교육기관이 어떻게 이 나라의 전체 학문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주는 연구비를 관장하는 연구지원기관을 겸할 수 있는가이다. 필자가 아무리 건문이 짧다고 하나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학 분야 연구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이다. 현재 한국학진흥사업단은 단장과 부단장, 사업기획실과 사업관리실에 각각 5명과 6명, 총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단장과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인문과장, 학계에서 참여한 11명으로 구성된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가 있다. 한국학진흥사업단의 단장은 원내외의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공모를 통해 선임된 역대 3명의 단장은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교수들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늬만 공모’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학계에 연구 지원과 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기관의 교수를 단장으로 임명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는 한국학진흥사업의 자문 및 심의, 심사를 위한 패널 추천 등을 담당하며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이들이 연구 지원 및 심사의 핵심 업무인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 분들의 인격을 못 믿는 바는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2중, 3중의 방지 장치를 마련해놓은 PM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수시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방지 장치도 없는 이런 심사·관리제도에서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지난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건비 6억여 원을 부당 집행하고 한국학대학원은 학생 정원 대비 교원 수를 기준보다 4배 이상 뽑았으며 2009년부터 27명의 교수강의 없이 근무해오고 수탁사업 간접비를 교직원의 선택적 복지비로 이중 집행하고 시설공사를 과다 설계하는 등 연구원 업무 전반에 걸쳐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것이다.²⁶⁾

경제용어로 웨더독(Wag The Dog)이라는 말이 있다. 개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으로 증시에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현물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파생의 본래 취지가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인데 투기꾼들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어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26) 『서울신문』 2012년 7월 12일

가치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파생상품 거래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분에 넘치게 많은 사업을 벌이고 학술연구지원기관 행세까지 하면서 건전한 한국학 분야의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모습이 바로 웨더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국학) 연구와 교육, 토대사업의 진행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연구지원과 관리 업무는 해외·국내를 불문하고 스스로 내놓아 전문 학술연구지원기관에 넘겨야 할 것이다.

3. 앞으로의 과제

사실 인문·사회 분야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의붓자식 취급받고 한국학 분야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쫓겨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와서 구박받고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내 옛 교육인적자원부 쪽과 옛 과학기술부 쪽의 파워 게임의 결과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주인 옛 교육인적자원부 쪽은 이미 옛 과학기술부 쪽에 밀려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옛 과학기술부 쪽은 인문사회 분야의 예산을 조금씩 올려주면서 200~300억 원 규모의 인문학진흥사업과 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을 통해 인문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국학 분야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내보냄으로써 쉽게 한국연구재단을 이공계 중심으로 장악하였다.

따라서 연구지원사업에서 새로운 교두보가 필요했던 옛 교육인적자원부 쪽은 그 대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선택하고 한국학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몰아주고 나아가 학술연구지원기관의 기능까지 부여했다. 이는 2007년 92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2012년 272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더욱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하여금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도 관장하게 하고 예산도 100억 원 가까이 배정함으로써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게 되었다. 비록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밀려났지만 결국 옛 교육인적자원부 쪽은 연구 지원에서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 국내의 한국학 분야 학계와 해외의 한국학계에 이전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벌써 대선 후보 중에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가 등장하고 있다. 만약 과학기술부가 부활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둘로 나누어진다면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옛 한국학술진흥재단 같은 기관이 부활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인문·사회 분야만을 전담하는 학술연구지원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나아가 그 기관이 교육부 소속이 아닌 미국의 NEH나 영국의 AHRC처럼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학술연구지원기관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홀로 설 때가 됐다. 독립적인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인문사회연구재단’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1989)이나 과학기술기본법(2001)과 같은 ‘인문사회연구진흥법’도 가질 때가 됐다. 또한 인문학 분야 연구기관이 한 개도 없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도 ‘인문정책연구원’ 같은 것이 하나쯤 있을 때도 됐다.²⁷⁾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집어넣어 꼭 실현시키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법학과 공학·의학이 전공이었던 그들에게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부활이나 혁신경제를 통한 성장만으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27) 권용혁 외, 2009 『인문·사회 학술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이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서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은 이번 ‘학술지원제도 개선방안’ 같은 데서 드러난 압축성장 방식을 지양하고 넓은 대지에 씨를 뿌린 뒤 거름을 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농부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노벨상도, 인문학의 위대한 사유도 이런 비옥한 땅에서 꽃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란 계모를 잘못 만나 스스로를 잠시 관학(官學)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한국학 분야도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 가운데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한국사와 한국철학, 한국문학 등의 한국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제경쟁력이 가장 없는 분야도 이 분야이다. 세계와 소통이 가장 적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학 분야의 지원은 세계와의 소통을 장려하면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학 분야를 연구하겠다는 우수한 석·박사과정 학문후속세대들이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금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필자가 방문 교수로 나가서 보았을 때도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이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사업은 국내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한국학 사업은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따라서 연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10년이나 20년 뒤, 돌아온 이들이 우리 학계의 소장·중견 연구자들이 되었을 때 한국학 분야는 자연스레 세계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서양의 한국학계는 전근대시대는 정제성론이, 근현대시대는 식민지근대화론이 대세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하면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이 뭉 주고 뺨 맞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학 분야 기획 연구 지원은 이론과 실증 양 차원에서 이에 대비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방대한 한국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DB화,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지속되고 확대되어야만 한다.

기존 한국학 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농부 방식의 지원, 우수한 학문후속 세대들의 해외 연구 지원, 정체성론이나 식민지근대화론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여기에 홀로 서기 하겠다는 학계의 의지,²⁸⁾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때쯤 되면 한국학 분야는 명실상부하게 이 땅에서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학문 분야가 되어 있을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 관료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 육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러나 그 길이 정도(正道)이다.

28) 강길호 외, 2005 『인문사회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학술진흥재단